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과 북·중 경협 전망

조명철 국제개발협력센터 통일국제협력팀 선임연구위원 (mjcho@kiep.go.kr, Tel: 3460-1185)

김지연 국제개발협력센터 통일국제협력팀 연구원 (jykim@kiep.go.kr, Tel: 3460-1055)

차 례 ● ● ●

1. 최근 북·중 정상회담 내용과 주요 특징
2. 최근 북·중 간 주요 경협 관련 논의 동향
3. 향후 전망

주요 내용 ● ● ●

- ▶ 김정일 위원장은 이번 방중에서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원자바오 총리와도 개별회담을 가짐.
 - 김 위원장은 후 주석과 양국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을 논의하였고, 원 총리와는 북·중 경제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함.
- ▶ 이번 김 위원장의 방중은 △ 북·중 경제협력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 대부분의 수행원이 당 책임자 들이며 △ 합의내용이 포괄적이면서 2010년과 유사하다는 특징을 보임.
- ▶ 김정일 방중을 전후하여 논의되고 있는 주요 북·중 경협업체들은 △ 라진-선봉개발 △ 신의주-단동 연계개발 △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 추진 △ 남포특구 개발 등임.
 - 북한 내각 산하기구인 조선합영투자위원회는 라선시 개발과 관련해 중국 상지관군투자유한공사와 2011년 3월 20억 달러의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두 기관은 라선지역을 △ 원자재공업 △ 장비공업 △ 첨단기술공업 △ 경공업 △ 서비스업 △ 현대고효율농업 등 6대 산업특구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임.
 - 북한은 황금평 개발을 중심으로 신의주-단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과 이 지역에 △ 상업센터 및 정보산업 △ 관광문화산업 △ 현대시설농업 △ 가공업 등 4대 산업특구를 건설할 계획임.
 - 이 외에도 북한은 중국 대풍그룹과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풍그룹은 북한의 하부구조 건설과 농업, 석탄, 금속 등 기초공업 발전 및 지역개발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음.
- ▶ 향후 북·중 경협의 방향은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상호이익이 되는 차원에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북·중 정부간 협력은 꾸준히 지속될 전망이며, 특히 인프라 개발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기업간 협력은 △ 투자일변도가 강화되고 △ 자원개발 분야에 집중되며 △ 중국의 동북개발과 북한개발이 연계되는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이 외에도 북한의 무역활성화 및 외자유치 노력은 한반도 정세완화 및 북핵문제에 대한 해결구도 진입 여부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되며, 북·중 경협 및 이를 통한 북한의 경제발전을 안정적, 지속적으로 이루기 위해 양국 협력은 북한의 개혁개방 및 시장경제 도입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임.

1. 최근 북·중 정상회담 내용과 주요 특징

가. 정상회담 내용

■ 김정일 위원장은 후진타오 주석과 회담에서 양국간 협력에 대한 전반적인 의제를 논의하였음.

- 김 위원장과 후 주석 간의 회담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 양국 협력 강화 △ 한반도 정세안정 등으로 요약됨.
- 북·중 관계 강화를 위해 합의된 방안은 △ 고위층 교류 강화 △ 당국가 관리 경험 교류 △ 상호이익이 되는 경제협력 확대 △ 문화교육체육 교류 심화 △ 국제 및 지역 정세와 중대 문제에 대한 소통과 협조 강화 등이 포함됨.
 - 고위층 교류강화란 양국 지도자 간의 상호방문, 특사 파견, 구두친서 전달 등 유연하고 다양한 방식을 통한 양국간 교류 활성화를 의미함.
 - 당국가 관리 경험 교류 활성화란 양국이 국정 운영에서 보다 자유롭게 의사를 교환한다는 의미로 풀이됨.
 - 상호이익인 경제협력 확대란 양국간 무역증대, 투자활성화, 지원강화 및 연계 인프라 확대의 의미로 재해석됨.
 - 문화교육체육 교류 심화란 교육,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교류를 활성화시키되, 특히 양국 청소년 간의 교류를 강화한다는 것은 양국의 전통적인 우의가 후세대까지 이어지게 한다는 것을 의미함.
 - 국제 및 지역 정세와 중대 문제에 대한 소통과 협조 강화란 양국이 내정 및 외교에서 중대 문제, 국제 및 지역정세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의사를 교환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내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평화와 안정을 함께 수호한다는 의미임.
- 한반도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 논의된 의제는 △ 6자회담 재개 △ 한반도 비핵화 및 정세완화 등임.
 - 김 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 및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반도 정세완화,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나타냈으며, 이에 대해 후 주석은 6자회담 재개 및 한반도 비핵화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였음.¹⁾

■ 이번 방중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원자바오 총리와 개별회담을 갖고 북·중 경제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함.

- 김 위원장은 신(新)압록강대교 건설을 예로 들면서 양국간 경제협력 수준을 격상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대해 원 총리는 지방과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 양국간 경제협력을 상호이익이 되는 형태로 활성화시키자고 화답함.²⁾
- 김 위원장과 원 총리 간의 구체적인 합의사항에 대해 발표된 바는 없으나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심도 있는 경제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추정됨.
- 이번 정상회담에서 심도 있는 경험방안이 논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는 △ 양 대표의 회담이 전례가 없는 첫 공식회담이었다는 점 △ 미국의 경제제재와 천안함 및 연평도 사태 이후 남북교역 중단에 따른 북한의

1) 조선중앙통신(2011. 5. 26).

2) 신화통신(2011. 5. 26).

경제난이 심화되었다는 점 △ 북·중 경제협력 규모가 꾸준히 증대하고 있다는 점 등임.

- 특히 창지투 개발계획과 연동해 라선개발, 황금광위화도 개발, 신압록강대교 건설 등 중국이 다양한 대북투자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상황에서 두 정상이 양국간 경험 강화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을 것으로 추정됨.
- 변경무역 활성화 방안은 양국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중 일부였을 것으로 추측됨.
 - 이번 회담에 배석한 북측 수행원들을 살펴보면 태종수 전 함경남도 당위원회 책임비서와 박도춘 전 자강도 책임비서, 문경덕 전 평양시 책임비서가 포함되었는데, 이는 변경무역 활성화와 이를 통한 지방과 중앙 간 연계발전을 고려한 김 위원장의 의도에서 비롯된 조치로 해석됨.³⁾

나. 주요 특징

■ 첫째, 이번 김 위원장의 방중은 북·중 경제협력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김 위원장의 방중 일정은 대부분 산업시찰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김 위원장이 7박 8일 동안 방문한 곳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이치자동차제방자동차 공장 △ 한장개발구 징아오 태양광회사를 포함한 IT 회사 △ 수귀 대형할인매장 △ 판다전자 △ 중관춘 선저우수마 등 산업지역임.
- 김 위원장은 원 총리와 개별회담에서 신압록강대교 건설을 예로 들며 양국간 경험수준을 격상하자고 제안하였는데, 이는 김 위원장의 방중 목적에 북·중 경제협력 강화가 포함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됨.
- 현재 북한과 중국 간에 다양한 경제협력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북한은 미국의 대북제재 및 한국의 5·24 조치 등으로 인해 외자유치 및 무역활동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북·중 경제협력을 강화해 북한이 당면한 경제난을 해소하려는 시도로 보임.

■ 둘째, 김 위원장의 방중 수행원들은 대부분 당 책임자들로 구성되어 있음.

-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에는 김기남 비서, 최태복 비서, 강석주 외교담당 내각부 총리, 장성택 당 행정부장 겸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일 당 비서, 박도춘 당 비서, 태종수 당 비서, 문경덕 당 비서, 주규창 당 기계공업부장,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 등이 수행함.⁴⁾
- 지난해 김 위원장의 방중 수행원에는 당 관계자뿐만 아니라 정, 군, 지방정부의 당 최고책임자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데 반해 이번 방중 수행원 명단에는 당 관계자들과 군수산업 관계자들이 대거 포함되었음.
- 수행원 명단을 통해 이번 김 위원장의 방중은 6자회담 재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음.

■ 셋째,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은 매우 포괄적이면서 2010년 의제와 매우 유사하다는 특징을 보임.

-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은 구체성이 없고 매우 포괄적임.

3) 중국관영TV 보도(2011. 5. 27).

4) 조선중앙통신(2011. 5. 26).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매우 폭넓은 범위에서 전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이번 회담이 실무회담이 아닌 정상회담이라는 데 기인함.
-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의제는 2010년 의제와 매우 유사함.
- 지난해 5월 김 위원장과 후 주석 간에 합의된 의제는 △ 고위층 교류 지속 △ 내정 및 외교문제, 국제정세 문제 등에 대한 전략적 소통 강화 △ 경제협력 강화 △ 사회문화교류 강화 △ 국제지역 문제 관련 협력강화 등임.
-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는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의제와 매우 유사하며, 이는 지난 1년간 양국이 합의한 경제협력 의제들이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음을 의미함.

2. 최근 북·중 간 주요 경협 관련 논의 동향

- 이번 김 위원장의 방중은 남양과 투먼을 통과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는 북한과 중국의 최북단 국경지대에서 추진되는 라선특구 개발에 대한 김 위원장의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는 의미로 풀이됨.
 - 김 위원장의 방중은 중국의 북동지역인 투먼에 입국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는 김 위원장이 지난 여섯 차례에 걸친 방중 경로에서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노선임.
 - 이는 북한이 북동 접경지역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라선특구 개발에 대해 김 위원장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 최근 북·중 간 추진되고 있는 주요 경협사업은 크게 동북부, 서부, 기타 지역을 중심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동북부지역에서 추진되는 주요 북·중 경협사업에는 라진-선봉 개발이 포함되고, 서부지역에서는 황금평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기타 지역에서는 10개년 전략계획과 남포특구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가. 동북부지역의 라진-선봉 개발사업

- 2011년 3월 북한 조선합영투자위원회(이하 합영위)는 라선시 개발과 관련해 중국 국유기업인 상지관군투자유한공사(商地冠群投資有限公司, 이하 상지공사)와 20억 달러의 투자 계약을 체결함.
 - 2010년 12월 북한 합영위 대표단은 베이징에서 중국 상무부와 5년에 걸쳐 총 35억 달러를 함께 투자해 라선특구 및 압록강 섬 황금평을 개발한다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이에 따라 북한은 토지와 노동력을 제공하고, 중국은 20억 달러의 개발자금을 공급하기로 함.
 - 합영위와 상지공사가 제시한 라선개발 청사진은 처음 2~3년간 라선지역 개발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집중적으로 구축하고, 이후 5~10년간 라선지역을 동북아 최대 핵심공업특구로 육성한다는 것임.

- 최근 북한은 라선지역을 ‘강성대국 선구지역’으로 지정하고 중국과 협력하여 이 지역을 시장경제원리가 적용되는 거점 산업벨트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 북한과 중국은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이후 후속작업으로 ‘조중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경제지대 공동개발계획 요강’을 작성하여 두 지역 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발표함.
 - 이 요강에 따르면, 양국은 라선지대를 대외교류의 시험지역, 강성대국의 선구지역, 북·중 경제협력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 원자재공업 △ 장비공업 △ 첨단기술공업 △ 경공업 △ 서비스업 △ 현대고효율농업 등 6대 산업을 육성할 계획임.⁵⁾
 - 단기적 차원에서 북한과 중국은 라선지역을 특수공업지대로 개발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국제관광지역으로 개발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음.
 - 단기적으로, 북한과 중국은 라선경제무역지대에 라진-선봉-웅상-굴포로 이어지는 산업벨트를 조성하고, 10개의 공업단지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음.
 - 10개 공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양국이 계획한 발전구상을 살펴보면, 양국은 라진에 △ 창고보관물류 △ 장비제조 △ 첨단기술 △ 피복식품 가공 등 4대 공업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며, 구체적으로 장비 제조와 관련해서 수만 톤급 도크 건설 및 선박수리제조시설 구축, 첨단기술산업과 관련해서는 전자공업과 의약품, 약초재배 산업육성을 계획하고 있음.
 - 양국은 선봉에 △ 원자재공업 △ 방직피복 △ 장비제조업 △ 농산물 가공 등 4대 공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구체적으로 이 지역에 화물자동차 조립공장을 설립한 후 일용금속제품과 건설용 금속자재, 경공업 기계제품 생산시설을 구축할 계획임.
 - 웅상지역에는 제지, 가구, 연필, 합판 등을 제조하는 종합 목재가공공단이 조성될 예정이며, 굴포지역에는 채소, 임업, 과수업 등 고효율 농업시범단지가 조성될 계획임.
 - 장기적으로, 북한과 중국은 라선지역을 국제적인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임.
 - 초기단계에서 양국은 북한, 중국, 러시아 접경지역의 민속 문화와 이 지역이 보유한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해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라선지역에 호텔, 휴양지, 관광도로 등 관광기초시설을 세울 계획임.
 - 이후 양국은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과 연계하여 △ 중국 연변 △ 북한 라선, 청진, 칠보산, 금강산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사할린 △ 일본 니가타, 삿포로 △ 한국 속초, 부산 등을 잇는 동북아 관광 코스를 개발해 라선지역을 세계적인 관광지역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음.⁶⁾
 - 2010년 중국 지린성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2억 5천만 위안(RMB)을 들여 원정-사합-홍회-웅상-라선을 연결하는 4차선 도로를 건설하기로 북한정부와 합의하고 현재 설계작업에 돌입함.

5) 조중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계획 요강(2010).

6) 조중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계획 요강(2010).

그림 1. 라선지역 개발계획



■ 북한과 중국은 라선지역의 산업발전을 현실화하기 위해 이 지역에 육해상 교통로 및 전력공급, 통신망 등과 관련된 사회기반시설도 함께 구축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교통로와 관련하여, 북한과 중국은 라선지역에 ‘1중추, 3방향, 5통로’ 방식의 개방된 교통망 구축을 계획함.
- 양국은 원정-라진, 선봉, 웅상항에 도로망을 건설하고, 원정-권하 국경 인도교를 보수해 운송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라진-원정, 라진-청진, 라진-두만강 간 고속도로를 건설하기로 합의함.
 - 2011년 현재 중국 길림천우건설집단주식유한공사가 라선-웅상라-홍의라-사합라-원정통상구를 연결하는 폭 12m, 길이 66.7Km의 도로공사 준비작업에 착수하였으며, 공사비용으로 약 2,266만 미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지린성 정부는 북한과 2012년까지 4차 도로와 대교를 건설하기로 합의하고, 공사비용 전액을 지린성 정부가 부담하기로 함.⁷⁾
 - 중국의 천우건설집단은 투먼과 청진을 잇는 도로포장사업 착공계획을 발표하고, 북한과 중국은 사업추진을 위해 평양에 조중 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합의함.
- 철로망 구축과 관련해 양국은 라진-선봉-남양 철도를 개보수하고, 장기적으로 훈춘-훈릉 간 철도를 건설할 계획이며, 항공운송 능력 향상을 위해서 청진시 삼해리에 민영비행장을 건설하는 계획도 세움.⁸⁾
- 항구제반시설 구축과 관련해, 북한과 중국은 라진항에 종합적인 항구로를 건설하는 동시에 라진항 부두시설을 개조해 수용능력을 확대할 계획임.
- 중국은 라진항 1~3호 부두시설을 개조해 단기적으로 5만 톤급 이상의 다용도 선착시설을 마련할 계획임.
- 중국은 라진항 4호 부두를 30만 톤급 광석부두, 5호 부두를 20만 톤급 컨테이너 부두, 6호 부두를 10만 톤급 종합 화물부두로 건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또한 중국은 라진항 개발과 연계하여 미화 1천만 달러를 투자해 건축면적 6,000m²에 4천 개의 판매대를 갖춘 현재의 라진시장을 건축면적 4만m², 3만 개의 판매대를 갖춘 시장으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전력공급과 관련해 양국은 라선지역에 석탄발전소를 건설해 기존 선봉화력발전소의 중유발전기를 대체하고, 풍력발전과 태양열발전을 이용하는 방안도 모색하는 한편, 100V 변전소와 송전선로를 설치할 계획도 갖고 있음.
- 합영위와 라선개발을 위해 20억 달러의 투자를 계약한 상지공사는 현재 라선시의 열악한 전력사정을 감안해 라선에 화력발전소가 건설될 때까지는 중국 동북 지방에서 직접 전기를 공급하고, 낙후된 송배전시설도 모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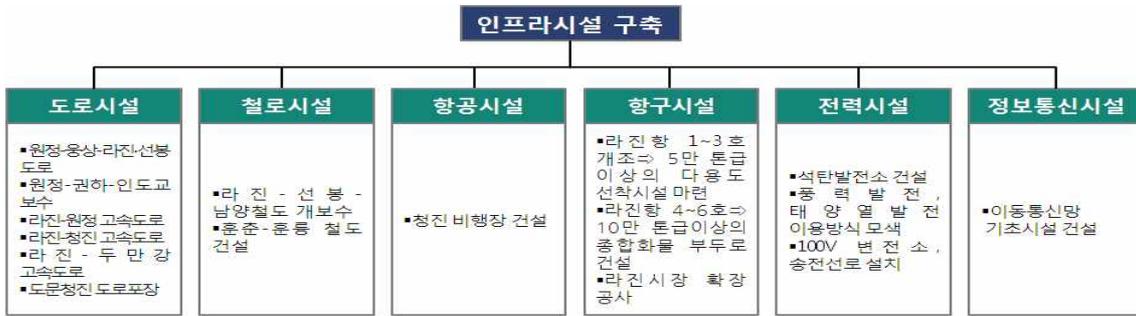
7) 민족21(2011. 3. 1).

8) 연합뉴스(2011. 5. 23), 「北라선-황금평, 시장원리 산업벨트로 육성」.

교체할 계획을 발표함.⁹⁾

- 정보통신의 경우, 양국은 이 지역에 이동통신망 등의 기초시설을 만들고, 이후 이를 서로 연결시키는 방안을 계획, 모색하고 있음.

그림 2. 라진-선봉 인프라 구축계획



- 2010년 북한은 라선특구 개발이 성공할 수 있도록 중국과 공동운영체계를 마련하고, 라선지역 투자와 관련된 법률을 개편하는 동시에 라선시를 특별시로 승격하면서 책임금에 대한 인사개편을 단행함.

- 북한과 중국은 라선특구 공동운영을 위해 정부간 협조체계인 공동지도위원회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공동개발관리위원회, 투자개발공사 등 세 단계 협조체계를 마련함.
 - 공동지도위원회는 양국이 개발협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책이나 원칙적 문제들을 조정, 협상하는 업무를 수행함.
 - 공동개발관리위원회는 두 경제지대의 투자유치, 기업설립, 환경보호 등의 관리권을 행사하고, 토지개발, 상업개발, 기초시설 운영방안 등을 심사함.
 - 투자개발공사의 경우 공동위원회의 위임으로 토지 및 해안선 개발, 상업개발을 책임지고, 투자자들이 투자권, 경영권, 수익권을 누릴 수 있게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함.
- 북한과 중국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지역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시장주의적 세무·금융정책을 마련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조중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경제지대 공동개발총계획 요강’에 명시함.
- 세무정책의 경우, 북한은 라진·황금평 지역에서 세금반환을 허용하고, 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설비·물자와 가공제품의 수출관세 면제정책을 마련함.
 - 2010년 9월에 발표된 ‘라선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규정규칙’에 따르면, 북한은 하부구조 건설부문(SOC)에 우선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업소득세는 이윤이 나는 해부터 5년간 면제, 그 다음 3년간 50% 감면한다는 5면 3감 정책을 발표함.¹⁰⁾
 - 또한 북한은 기업이 3천만 유로 이상을 인프라에 투자할 경우 4년간 소득세를 면제하고 3년간 50%를 감세한다는 ‘4면 3감’ 정책을 제시하였으며, 생산부문에서 외국기업이 1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하면 이윤이 발생하는 해부터 3년간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이후 2년간 50% 감면하게 한다는 ‘3면 2감’ 정책도 제시함.¹¹⁾

9) 민족21(2011.5.1), 「북, 라선시에 20억 달러 규모 투자유치 평양에 국제무역센터 건설 착공」.

10) 라선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규정규칙(2010).

11) 라선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규정규칙(2010).

- 토지사용과 관련하여 북한은 두 지역에서 투자자들이 사용기한 내에 양도, 임대, 재임대, 청부, 저당, 상속할 수 있도록 조치함.
 - 북한은 재산세와 관련해 과세대상을 비생산용 고정재산뿐만 아니라 주택용 건물인 경우 외국인이 직접 건설했거나 자기 자금으로 구입한 경우 준공일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는 등 특혜조치도 발표함.
 - 금융정책과 관련해 북한은 기업이 중국 인민폐와 북한 원, 그리고 별도로 규정하는 화폐로 결제하는 것을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자가 단독은행, 합영은행과 다른 금융기구를 설립하고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
 - 근로자 계약과 관련하여 북한은 기업이 노동자들과 자율적으로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경영과정에서 인력 채용과 해고, 제품 판매가격, 파산, 청산 등 기업행위를 시장원칙에 따라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밝힘.
 - 외국인투자 보호를 위해, 북한은 요강에서 외국인투자자가 이윤 및 자산을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와 자산은 국유화하거나 징수하지 않는다는 투자보호조항을 명시함.
 - 위 요강에서 북한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세제의 일관성을 강조하는 대목도 포함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금특혜 조치가 자주 변경되면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세제특혜를 꾸준히 제공한다는 대목을 세금규정규칙에 포함시킴.
 - 또한 업종별 입주허가정책을 제정함으로써 투자분야와 투자업종에서 라선, 황금평지대법과 정책이 명백히 금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양한 제한조치를 해제함.
- 북한은 2010년 라선시를 특별시로 승격시키고, 책임자들에 대한 인사개편을 단행함.
- 무역상을 지낸 림경남이 시당책임비서로 임명되었고, 이후 영어를 전혀 못하는 김수열 시인민위원장과 채송학 부원장·최광훈 부원장 등이 경질되었으며, 대신 조종호 전 무역성 부상이 시인민위원장으로 임명됨.
 - 또한 북한은 림경남 시당책임비서가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직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는데, 이는 라선시를 국제적 경제특구로 육성하려는 북한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처사로 풀이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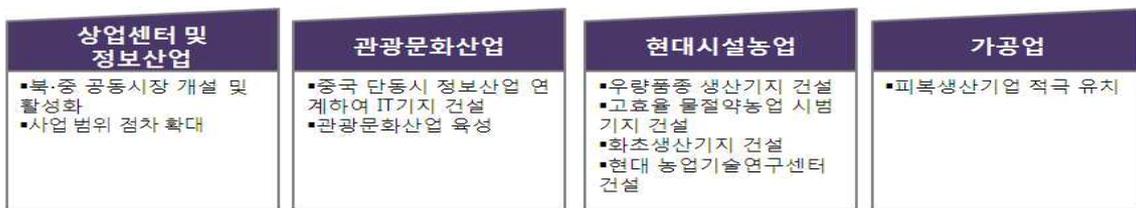
나. 서부지역의 신의주-단동 연계 개발사업

- 서부지역 개발의 핵심인 신의주-단동 연계개발은 황금평 개발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최근 라선개발과 함께 북한의 지도부가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는 사업임.
- 최근 만들어진 ‘조중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총 계획요강(이하 전체요강)’은 총 4편 11장 56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제3편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 요강(이하 황금평 요강)’을 기술하고 있음.
- 전체 요강 제1편 ‘계획배경과 총개발 목표’에서는 황금평 경제지대를 약 15km²로 규정하고, 최종면적은 북·중 양자가 공동 측량한 후 확정하기로 함.
- 북한과 중국은 압록강 하구에 위치한 황금평지역에 4대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이 지역을 지식밀집형 신흥경제 구역으로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음.¹²⁾

12) 조중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계획 요강(2010).

- 북한과 중국이 황금평지역에 건설하려는 4대 산업단지에는 △ 상업센터 및 정보산업 △ 관광문화산업 △ 현대 시설농업 △ 가공업 등이 포함됨.
 - 상업센터 건설계획을 살펴보면, 북한과 중국은 단기적으로 북·중 공동시장을 개설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다가 점차 사업범위를 서비스업 및 오락시설 건설, 쇼핑, 오락, 휴식, 사무, 공연관람, 금융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움.
 - 정보산업 발전방안은 황금평 경제지대와 중국 단둥시의 정보산업을 연계하여 이 지역에 IT 기지를 건설하고, 다양한 문화 공연, 공예품, 회화 등을 개발하여 관광문화산업을 육성한다는 구상임.
 - 현대시설 농업방안은 양국이 이 지역에 우량품종 생산기지를 건설하여 곡물생산량을 늘리고, 분수식 관개 및 특정한 관개 시설을 이용하여 고효율 물절약 농업시험기지를 건설하는 동시에, 현대적인 태양에너지 온실, 채소, 과일, 화초생산기지를 건설하고, 현대농업기술연구센터를 건설한다는 내용임.
 - 피복가공업 발전방안은 피복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이 지역에 피복공장 건설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이 지역에서 피복과 장식제품이 생산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임.
- 북한과 중국은 단기적으로 공동시장, 피복가공 등 초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산출하면서 황금평 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점차 발전의 범위를 4대 산업으로 확대한다는 입장임.

그림 3. 황금평지역에 계획된 4대 산업 조성계획



- 인프라 개발을 위해 북한과 중국은 이 지역에 항구, 도로 건설 외에 단둥에서 직접 전력선로를 끌어와 배전망을 건설하고 인터넷, 이동통신망을 설치할 계획임.
- 실제 북한과 중국은 황금평과 신의주를 잇는 여객화물부두를 건설하기로 합의하고, 황금평지대 내 그물 형식의 도로망을 구축하는 한편, 황금평과 중국 단둥신구 간 두 개의 출입도로를 건설하기로 함.
- 이 외에도 양국은 중국 단둥비행장을 통해 대외항공교통 이용을 편리하게 하며, 중국 단둥에서 직접 전력선로를 끌어들이 배전망을 건설하는 동시에 가스공급과 열공급 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음.
- 2011년 현재 북한은 나선 관리와 마찬가지로 중국과 공동지도위원회-공동개발관리위원회-투자개발공사 등 세 단계의 협조체계를 통해 황금평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북한은 황금평지역에 외자유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라선과 마찬가지로 △ 수출입관세 면제 △ 외국인투자자의 자유로운 송금, 소득세 및 토지이용 특혜 △ 은행 설립 △ 인민폐-북한 원 또는 별도로 규정하는 화폐 사용 인정 △ 장기체류 허용 △ 기업-노동자 간 자율적 노동계약 제도 도입 △ 투자자산 등 자유로운 양도상속, 시장원칙에 따른 파산, 청산 등 다양한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기로 결정함.
- 황금평 개발 이외에 북한은 중국과 신압록강대교를 건설하고, 압록강 인근에 관광특구를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북한은 중국과 신의주 유초도와 단둥 랑터우항을 잇는 신압록강대교를 건설하는 데 합의하고, 2010년 12월 착공식을 가짐.
- 신압록강대교 건설은 김 위원장이 원 총리와 회담에서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를 제안하는 데 인용할 만큼 의미 있는 사업임.
- 북한과 중국은 조중우의교 북측 옆 압록강 인근을 관광특구로 개발할 계획인데, 이는 신의주를 거쳐 평양과 묘향산 관광을 오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중국과 압록강 인근에 관광특구를 설치하고, 이곳에 위락시설과 놀이시설, 국제규모의 면세점을 설립한다는 계획으로 요약됨.¹³⁾

다. 기타 협력사업

■ 2011년 6월 현재 북한은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중국 대풍그룹과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북한은 현재의 경제난을 타개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2011년 ‘10개년 전략계획’을 발표하고, 하부구조 건설과 농업, 전력, 석탄, 연유, 금속 등 기초공업, 지역개발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경제개발의 전략적 목표를 수립함.
- 북한과 대풍그룹이 추진하는 10개년 경제계획은 크게 △ 투자유치계획 △ 건설목표 △ 경제수익으로 구성됨.
 - 투자유치계획은 2010년 10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5년 내 1,200억 달러, 10년 내 4천억 달러 유치임.¹⁴⁾
 - 건설목표에는 △ 전력 3,800만Kw △ 정유 2천만 톤 △ 철도 9천만Km △ 강철 2천 톤 △ 석탄 1억 5천만 톤 △ 식량 1천만 톤 △ 항만능력 2억 6천만 톤 △ 고속도로 6천Km 등이 포함됨.¹⁵⁾
 - 예상 경제수익은 △ 국내총생산 6천~1조 달러 △ 재정수입 1,800억 달러 △ 무역규모 8천억 달러 △ 1인당 소득 3만 달러임.¹⁶⁾

그림 4. 10개년 경제계획

대풍그룹 사업계획(10개년 경제계획)		
투자유치계획	건설목표	경제수익
2010년 100억 달러	전 력 3800만Kw	G D P 6000~1조 달러
5년 내 1,200억 달러	정 유 도 2000만 톤	재정수입 1800억 달러
10년 내 4,000억 달러	강 철 2000만 톤	무역규모 8000억 달러
	석 탄 1억 5000만 톤	1인당소득 3만 달러
	식 량 1000만 톤	
	항만능력 2.6억 톤	
	고속도로 6000km	

- 북한과 대풍그룹이 제시한 구체적인 투자유치 전략을 살펴보면 △ 국가별로는 우선 중국 자본을 수용하되, 향후 대외환경이 개선되면 타국 자본을 흡수하고 △ 자본 성격별로는 공적 자본을 먼저 수용하고, 이를 점차 민

13) 민족21(2009.11.1), 「북, 압록강 연안에 경제특구와 관광특구 설치 추진」.

14)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2011).

15)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2011).

16)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2011).

간투자로 확대하며 △ 투자대상 면에서는 사회간접시설 투자를 우선시하고, 점차 기업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임.¹⁷⁾

- 북한이 외자유치를 위해 대풍그룹과 구사하는 주요 전략은 자원개발임.
 - 북한은 2011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원료, 자재생산을 주체화, 국산화하기 위한 투쟁에 커다란 힘을 돌려야 한다… 인민생활 향상과 경제강국 건설에 필요한 원료도 해결하고 자금도 확보(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은 지하자원 개발을 통해 마련하는 방안을 언급함.
 - 이는 지하자원 개발을 통해 외자를 유치하겠다는 북한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되며, 실제 북한은 라선개발에 20억 달러를 투자한 상지공사와 투자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무산광산 채굴권을 담보로 제공함.
- 북한은 2010년 남포지역을 특구로 개발하기 위해 행정구역 개편과 내각부서 인사조치를 단행하였고, 이 외에도 다양한 노력을 전개함.

- 2010년 조선중앙연감에 따르면, 북한은 남포항을 개발하고 이 지역을 특구로 조성하기 위해 평양시의 행정구역을 축소하고 남포시를 특별시로 승격시킴.
- 북한은 평양직할시에 포함되어 있던 강남군, 중화군, 승호구역을 황해북도에 편입시켰고, 남포특별시에는 종전 평안남도에 포함되었던 강서군, 대안군, 온천군, 영광군, 천리마군 등 5개 군을 포함시킴.
- 남포시 행정구역 개편과 연계하여 북한은 강양도 남포시 당위원회 책임비서를 당 중앙위원으로 선출함.
- 북한은 중국건설은행과 공동으로 평양에 국제규모의 은행을 창설하기로 합의하고, 중국기업과 평양 옥류교 근처에 국제무역센터를 설립하기로 합의함.

라. 조직체계

- 북한의 외자유치를 전담하는 공식기관은 내각 소속의 합영위와 국방위 산하의 대풍그룹임.
- 합영위는 2009년 북한이 대외무역기관에 대한 조직개편을 단행할 때 외자유치를 위해 설립된 외국인 투자유치 전담조직 중 하나임.
 - 합영위는 2010년 7월 북한 내각 전원회의에서 비준, 결성된 조직이며, 외자유치와 합영합작 등 외국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지도하는 북한의 국가적 중앙지도기관임.
 - 내각 직속기관인 합영위는 국가적 투자전략과 계획에 기초해 다른 국가와 정부간, 민간급 투자협정 및 투자계획을 체결하고, 다양한 방식의 투자와 경제특구에 대한 관리운영을 전담함.
 - 합영위는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13개 국(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 스위스 주재 외교관으로 활동한 이수영 전 제네바 북 대표부 대사가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음.

17) 민족21(2011.3.1).

그림 5. 합영위 조직도



자료: 민족21(2011. 3. 1), 『북, 제한조치 대폭 완화된 투자법 올해 공표 외자유치 통한 제한적 경제개발정책 추진』.

- 북한은 국방위원회 산하의 대풍그룹과 ‘10개년 전략계획’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음.
- 대풍그룹은 라선개발을 전담하는 내각 소속의 합영위와 함께 북한의 공식 외자유치 창구임.
- 합영위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외자를 유치하는 계획경제 부분을 담당하는 데 반해 대풍그룹은 대규모 인프라 건설 등 목적성 사업을 위한 비계획경제 부분의 외자유치를 담당하고 있음.
- 대풍그룹은 크게 전략기획실과 재정용자부, 자원산업부, 대외법률사업부, 통합관리부, 수출입부로 조직되어 있으며,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양건 당 중앙위 비서가 대풍그룹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중국인인 박철수 회장이 총재로 활동하고 있음

그림 6. 대풍그룹 조직도



자료: 민족21(2011. 3. 1), 『북, 제한조치 대폭 완화된 투자법 올해 공표 외자유치 통한 제한적 경제개발정책 추진』.

3. 향후 전망

가. 정부 차원

■ 첫째, 이번 김 위원장의 방중 이후 북·중 경험의 주체는 기업에서 정부 중심으로 변화될 것임.

- 과거 북·중 경험은 북한의 경우 당국이 주도하고, 중국은 영세기업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음.

○ 과거 북·중 경험과정을 살펴보면 지방정부는 정책입안에서 배제되었고, 재정부족을 원인으로 지방정부의 참여

수준도 매우 낮았음.

- 과거 북한과 교역하거나 북한에 투자한 중국기업들을 살펴보면 북한의 열악한 산업·투자 환경으로 인해 영세기업이 주류를 이루었음.
- 김 위원장과 원 총리의 회담 이후 양국간 경제협력은 기업 중심에서 정부주도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과거 정부가 환경을 만들고 기업이 경험을 조도한다는 입장에서 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정부가 조력한다는 입장으로 변화하였음.
- 그러나 원 총리는 김 위원장과 회담에서 지방과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 이는 중국이 북한과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 시 지방정부 및 공적기구의 개입을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됨.

■ 둘째,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중 경제협력은 보다 상호이익이 되는 차원에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 과거 북·중 경험은 중국의 일방적 지원 성격이 강했음.
- 그러나 향후 양국간 경제협력은 상호이익이 되는 차원에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 원 총리와 가진 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북·중 경험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대해 원 총리는 상호이익이 되는 형태로 양국간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답변함.
- 또한 김 위원장은 식량 및 원유 무상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원 총리는 북한의 원유자원 시추 및 개발협약을 거론하며 일반적인 경제교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짐.¹⁸⁾
- 후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경제지원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해 후 주석은 경제문제는 원 총리와 논의하라면서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짐.¹⁹⁾

■ 셋째, 북·중 경제협력은 양국 차기 지도부 체제 속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북·중 양국은 지도부 교체시기에 접어들었으며, 이 시기에는 전통계승과 혁신지향이 동시에 강조되기 때문에 양국간 경제협력은 새로운 지도부에 의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은 김정은 후계세습 과정에 진입하였고, 중국은 2012년 새로운 지도부 출범을 준비하고 있음.
- 지도부가 교체되는 시기에 북·중 수뇌부는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여 친선을 공고화하려고 노력할 것임.
- 또한 새로운 지도부를 구축하는 시기에 수뇌부는 과거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여 혁신을 지향하기 때문에 북·중 협력은 한 단계 발전된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음.
- 실제 김 위원장이 차기 총리로 지목되는 리커창 상무부총리 겸 공산당 상무위원과 중관춘을 동행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북·중 양국간 협력관계는 차기 정권에서도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넷째, 향후 북·중 정부간 협력은 인프라 개발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18)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2011. 5. 31).

19)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2011. 5. 31).

- 최근 중국정부는 접경국가의 경제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상호 발전하는 외교정책을 천명하였으며, 이를 위해 중국은 접경지역에 경제거점을 형성하고 연계 인프라를 확충하는 대외경제협력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중국정부는 동북진흥개발계획을 채택하고 동북지역 경제의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이를 위해 인접국인 북한, 러시아와 경협확대를 추진함.
- 중국의 주변국에 대한 외교정책과 동북개발전략은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이를 통한 경제개발 기반 마련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음.
- 중국의 동북개발은 북한의 현재 인프라 수준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우며, 중국정부도 이러한 한계상황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북·중 간 다양한 연계 인프라를 구상하고 북한과 구체적 계획을 협의하고 있음.
- 따라서 북한은 중국의 수요에 맞추어 공급국으로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자국의 인프라를 현대화하려는 목표를 추구할 것임.
- 북·중 기업간 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 환경을 개선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정부 차원에서 개입해야 할 수준의 막대한 투자비용을 요구함.
- 대푯그룹이 5년 내 북의 농업문제와 하부구조,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추정된 액수는 대략 1,200억 달러이며, 10년 내에 필요한 금액은 4천억 달러에 달함.
- 이처럼 산출된 투자비용은 일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정부가 개입되어야 할 수준이고, 인프라 시설이 구축된 상황에서 개별 기업들의 투자활동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양국간 경제협력은 인프라 개발을 중심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나. 기업 차원

■ 첫째, 향후 북·중 기업 간 협력은 투자일변도가 강화되는 차원에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의 산업은 해외에서 자본 및 기술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산정상화를 해낼 수 없는 상황인 반면, 중국의 동북개발은 북한의 산업생산물을 대규모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중국이 동북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산업생산물을 북한에서 조달받기 위해서는 북한 산업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임.
- 따라서 김정일 위원장 방중 이후 경협확대가 실질적으로 추진된다면, 이는 중국의 북한 산업시설에 대한 투자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중국은 북한의 산업생산물을 동북개발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북·중 경협이 교역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임.
- 특히 과거 교역 중심적 형태를 띠었던 북·중 경협이 북한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하였기 때문에 향후 중국의 대북투자는 북한의 산업을 현대화하고 신산업을 창설하는 방향에서 전개될 것으로 보임.

■ 둘째, 중국기업의 대북투자는 자원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회담에서 원 총리는 양국간 경제협력을 상호이익이 되는 형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북한 역시 2011년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자원개발을 통한 외자유치 계획을 표명하였음.

- 양국간 경험사업에서도 대풍그룹은 북한의 자원개발을 이용한 외자유치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실제 대북투자를 추진하는 중국기업들은 투자위험을 줄이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원개발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음.
- 중국 해관통계에 따르면, 2011년 4월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액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북한은 중국에 전년동기대비 6배 높은 114만 톤가량의 석탄을 수출하였고, 금액을 보면 8배 높은 약 1억 1,100만 달러를 벌어들임.
- 상지공사 역시 라선개발 투자에 대한 담보로 북한에서 무산광산 채굴권을 받음.

■ 셋째, 북·중 경제관계는 동북개발과 북한개발이 연계되는 가운데 이루어질 것임.

- 과거 북·중 무역은 동북지역과의 거래가 중심이 되었지만 다양한 지역과 기업에 의해 투자가 이루어져 왔음.
- 중국의 대북투자는 남방기업들의 자본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이후 경험확대 합의가 구체화, 가속화된다면 북한과의 거래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동북지역 기업들의 대북투자과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임.
- 중국의 동북개발은 막대한 철강자원, 금속자원, 에너지자원과 원부자재들을 소비하는 과정이고, 이러한 자원은 북한에 일정한 시설투자를 한다면 조달 가능한 상황임.
- 따라서 동북지역 기업들은 대북투자를 통해 북한 원부자재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이윤추구 및 경제성장을 유도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임.
-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북한과 동북지역의 경제 연계관계가 심화될 것임.

다. 기타

■ 북한의 무역활성화 및 외자유치 노력은 한반도 정세가 완화되고, 북핵문제가 해결구도에 진입하기 전까지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북·중 간 추진되는 다양한 경험사업들을 활성화하고 그 지위를 한층 격상시키기 위해서 북한은 무엇보다도 국제사회 내 중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회원국들과 협력체계를 구축,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북한은 핵문제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며, 특히 다양한 대북제재들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
-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과 연계되어 남북경협 역시 거의 중단된 상태이며, 이는 북한의 무역 및 외자유치 규모를 축소시켜 경제난을 가중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함.
- 따라서 북한이 대외무역과 외자유치를 활성화하고, 경제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에서 실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과 관계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일정한 선결과제 해결과 직결되어 있음.
- 구체적으로 북한은 △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비핵화 문제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 △ 북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 중단 △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중지 △ 영변지구 우라늄 농축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 기구 전문가들의 접근 허용 등 다양한 선결과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함.

■ 북·중 경험이 북한의 개방과 시장경제 도입을 전제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양국간 경제협력 효과는 꾸준히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중국의 대북투자가 급속히 늘어난다 할지라도 이러한 변화가 북한 경제성장을 유도하는 직접적 요인이 되고 그 효과가 장기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중 경험이 북한의 개혁개방 및 시장경제 도입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투자과 지원은 단기적 관점에서 북한의 경제성장을 유도할 수 있으나 북한의 체제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국제사회의 대북투자 및 지원활동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북한 체제에 상존하는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어렵게 함.
- 따라서 북한경제의 꾸준한 성장을 위해 북·중 경제협력은 북한의 개혁개방과 시장경제 도입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임. **KIEP**